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 특검은 정치공세”

윤석열 정부 2년 기자회견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납득 안되면 특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의대 증원 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다”며 사과했다.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집중적인 요구를 받았던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에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외교 등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격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감·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는,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니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 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 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할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려들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할 수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교통난 해소 ‘암초’ 만났다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사업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통과 불투명  
인프라 비용도 광주시와 ‘이전’

‘복합쇼핑몰 3종’ 사업 선두주자인 ‘더현대 광주’의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사업이 ‘교통난 해소’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달 첫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실상 원점 수준의 재심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일로 예정된 재심의 통과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 지연마저 우려되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사업자측 의견 등을 종합하면,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사업지 주변 임동 오거리와 광천동 사거리 일대는 지금도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로(광주일보 5월 1일자 1면)라는 점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 사업지 주변에서 추진 예정인 ‘신세계 백화점’ 신축사업과 광천동 재개발 사업을 배제한 ‘나 홀로 교통대책’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해결 과제는 광주시와 사업자가 교통난 해소 비용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사업지 주변 도로확장 등은 당연히 사업자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5899억원이라는 역대급 공공기여금을 내기로 한 사업자측은 추가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사업지 주변 교통대책을 바라보는 광주시와 사업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차다.

교통영향평가의 핵심은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시민안전 확보인데, 광주시는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지와 신세계백화점 일대를 도보로 15분 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중심 교통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보행로를 최대한 확보해 보행자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차도는 최소화해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차량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과는 충돌하는 대책이다.

그동안 도로 확장 등 차량 중심의 교통영향평가를 준비해온 사업자는 물론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지역민의 반응도 엇갈린다. 쇼핑객에게는 필수인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심각한 교통난보다는 보행자 중심·대중 교통 체계 확대를 병행하는 게 효과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교통 관련 쟁점 때문에 10일 열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사업 관계자는 “주변 도로확장 등 교통대책 비용을 포함해 6000억원에 가까운 공공기여금을 내기로 결정한 것인데, (광주시가) 갑자기 교통대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해 당황스럽다”며 “현재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매일 2억원 인파의 사업비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등) 행정절차까지 지연돼 큰 부담”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장기 방치 ‘홍물 건축물’ 사라지나 ▶6면  
복스- ‘연등 문화의 역사’ ‘…곤충은 없어’ ▶14-15면  
글로벌 여행 성지 전남- 남도 한바퀴 ▶22면

생명영양농업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 대한민국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

### 전남형 상생 일자리 8.2GW 해상풍력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주민 이익 공유형 · 수산업 공존  
발전단지 조성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 조성**  
해상풍력 기자재 및 연관기업  
450개사 유치 · 육성

**‘12만개 지역일자리’ 창출**  
최첨단(AI, ICT 등) 전문직군 및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그린수소 전주기 메가 클러스터’ 구축**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